

	<h1>보도 반박</h1>				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'21.4.2.(금)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<b>담 당 자</b>	이 지 형 사무관 (02-2100-2836) 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

## 제 목 :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(아시아경제 4.2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### 1. 기사 내용

- 아시아경제는 4.2일자 “땅 투기 전면 차단 ... 전 금융권 LTV 70% → 40%로 강화” 제하의 기사에서
  - “정부가 땅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40%로 제한하기로 했다”,
  - “신규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적용할지, 과거 주택을 기준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할지 등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현재 「가계부채 관리방안」의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,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.
- ‘조정대상지역’과 연계하여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를 40%로 제한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,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